

전주야구장 윤곽 드러내... 공정률 65% 순항

야구장·육상경기장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 이전 신축...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각종 대회 개최 기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북부권 복합 스포츠타운에 건립 중인 전주야구장이 65% 공정률을 기록하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기존 덕진동 MICE 복합단지 개발부지에 위치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에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총사업비 142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6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물 외관과 위용이 서서히 드러내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신축되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은 공공체육 기본시설로서,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개최가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고 있다.

육상경기장은 공인 1급 시설이며, 야구장은 센터라인 121m, 좌우 98m 규모로 아마추어 경기는 물론 프로야구도 개최 가능한 운동장 규모다. 그러나 야구장 관중석의 경우 8176석



전주야구장 신축계획 조감도.

으로 계획돼 최근 인기몰이 중인 프로 야구 개최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1만 석에는 다소 못미친다.

이는 야구장 건립 구상 초기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프로 야구단이 없는 현실과 실제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시는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나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관석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 관람석은 외야석을 제외한 내야의 기초 크거나 기둥 부재가 최대 2만석까지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시공됐다.

뿐만 아니라 야구장 조영시설의 경우에도 조영타워 6기가 설치돼 내야 1500LX, 외야 800LX 수준으로 조성된

다. 이는 일반 경기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시는 필요시 등기구단 추가하면 외야 3000LX, 내야 2000LX까지 조도 상황이 가능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는 신축 야구장이 특정 리그 전용 시설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의 이용 수요에 맞춘 합리적인 규모로 야구장을 건립 하되,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 등 스포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기능성을 함께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신축 사업을 마무리한 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준비 착수

조직위원회 위촉식·1차 회의 열려

전주시가 내년 봄 전주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정원산업 분야 최대 규모 산업전인 '2026년 대한민국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준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1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참석한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2026년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아낌없는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분과의 역할을 분담하며 박람회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정원실무자 및 정원산업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총괄 △전시사업 △운영의 세 개 분

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각 분과에서는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정원산업전 구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이끌게 된다.

특히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예정된 산업전 참여업체 모집 방식과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의 장을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에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전주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코리아가든쇼와 우호정원, 시민정원 등 45개소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기존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정원산업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총 162개 정원산업 관련 업체가 참여했으며, 총 28여 명의 매출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전주가 정원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권희성 기자

노후화된 전주 산단, 경쟁력 갖춘 미래산단으로 바뀐다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지구·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공모 선정

노후화된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젊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단으로 점차 탈바꿈되고 있다.

특히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지구 선정과 산단환경조성사업 등 주요 공모사업이 잇따라 채택되면서 전주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산업 생태계의 중심인 노후 산업단지를 다시 뉘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산단 재생·고도화 정책이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로 이어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정부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높여 노후산단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다양한 국비 공모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재도약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지구와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디지털·친환경 전환 기반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국비 지원과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단지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구축 △무탄소 친환경의 깨끗한 산단 △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신나는 산단 3대 중점과제 및 23개의 핵심 세부 사업을 통해 산단 대개조를 도모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이와 동시에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에 따른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 산단에서는 △통합관리센터 구축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산단단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지난 10월 최종 사업계획 확정에 이어 지난달 한 국산업단지공단과 최종 협약이 체결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산단의 정주 환경 개선과 청년층 유입을 위한 공모 성과도 돋보인다. 시는 지난해 9월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이전기업 촉진 우수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 두 가지 공모사업을 연계한 총 363억 원 규모의 '팔복 산업단지와 허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4억 원이 지원되는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과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 포함될 이 패키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관과 근로환경을 직접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희성 기자

탄소중립 동참 전주시민 1만2000여명 인센티브 제공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동참한 전주시민 1만2000여 명이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기·수도·가스·자동차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가정과 상가, 자동차 등 1만 1997명에게 총 2억4000여 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한 달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현행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할 경우 가정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 연 최대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참여 시점 기준 주행거리 대비 참여 종료 시점의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할 경우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 상반기 참여자들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총 491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20년생 소나무 11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이와 관련 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연중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매년 2~3월경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전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치인 및 정당 등에서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정비를 나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프 △간접관 등 각종 유동 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작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조치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설치·배포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옮겨가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